



최지영 중앙일보 기자 choiji@joongang.co.kr

과학立法 국회통과 공로 과학인 평생 연금지급

과학계가 고대하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특별법(이하 이공계 특별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지난 3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과기부는 오는 8월, 늦어도 9월까지 세세한 시행령을 정하고, 예산을 반영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공계 특별법의 경우 ‘전자 군복무제’와 ‘초·중학교 교육과정의 이공계 관련 교과과목 개선’이라는 두 가지 핵심 조항이 빠진 채로 가결됐다. 전자 군복무제는 국방부의 반대로, 이공계 교육개선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반대로 삭제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특별법은 그동안 과학계의 숙원과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먼저 이공계 특별법을 살펴보면 부처별로 쏟아져 나오던 각종 이공계 지원책들을 체계적으로 매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 과학계를 들뜨게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이상희 의원은 “이공계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주관 부처인 과기부도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이공계 특별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은 ‘평생 연금제’다.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큰 공로를 세운 이들에게 국가가 올림픽 메달리스트처럼 평생 연금을 준다는 것이다. 제대로 운영된다면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올릴 획기적 조항으로

손꼽히고 있다.

연금지급은 크게 ‘생활보조금’과 ‘연구장려금’으로 나뉜다. 과기부는 재직기간중엔 연구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을 줄 계획이다. 퇴직 이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생활보조금이 지급된다. 이렇게 하면 업적이 뛰어난 과학자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평생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가 인정한 과학자라는 자긍심은 물론 경제적 안정까지 누릴 수 있게 된다.

연금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과기부측은 “체육분야를 벤치마킹해 얼마씩 지급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금 재원은 과학기술기금에서 지급하게 된다. 선정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국제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낸 소수의 과학자들을 매년 선정해 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 눈에 띄는 것은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 조항이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독자적으로 연구개발(R&D)을 수행하기 힘든 중소기업들을 위해 R&D나 제품 시험, R&D 컨설팅을 대신 아웃소싱으로 해주는 서비스업이다. 현재 국내에선 R&D 대행업체가 60여 곳, R&D 컨설팅업체가 40여 곳, 시험·분석 대행업체가 170여 곳이 영업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R&D서비스업 육성은 이런 업체들에서 일할 우수 이공계 인력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서비스 자격증 제도’를 과기부가 주관기관이 돼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공계 인력을 채용하는 중소·벤처기업들에 세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마련한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법령에 명문화했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공계 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울 것도 의무화했다.

같은날 본회의는 국가 과학기술 업무 조정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또하나의 법도 개정, 통과시켰다. 그 동안 대통령의 의장 겸임 여부로 야당이 반대해오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바로 그것이다. 자문회의법은 대통령이 자문회의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개정됐다. 그 동안 야당에선 자문을 듣는 기구의 장을 직접 대통령이 맡는 것이 모순이란 지적이 강하게 일었다.

이번에 정부안이 통과된 것은 ‘과학기술 정책에 힘을 신기 위해서’란 정부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간위원들도 대폭 늘어났다. 10명인 민간위원도 20명으로 2배 증가해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과학계에서는 연구현장과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위원수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줄곧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국가 연구개발 비전을 만드는 작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일고 있다. ㉔